

광주 ‘도심의 허파’가 살아난다… 민간공원 10곳 대변신

9개 공원 특례사업 2027년까지 순차적 시민 품으로 돌아와
중앙1지구 테마숲·힐링캠핑장 등 갖추고 내년 6월 시민 맞이

민선 8기 들어 광주 도심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본격화에 진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를 막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사업 착수 8년 만인 올해 첫 준공 공원이 나오는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가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025년 12월 말 기준 60%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1단계인 수랑·마록·송암·봉산공원과 2단계인 일곡·중앙1·중앙2·중외·운암산·신용공원 등 총 9개 공원(10개 사업지구)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786만 8465㎡에 달하며, 이중 90.4%인 710만 7391㎡가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처가 된다.

가장 먼저 시민들을 만나는 곳은 북구 신용공원과 서구 마록공원이다.

신용공원은 오는 2월 공원시설 공사를 마치고 기부채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3월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이 나온 관리권이 광주시와 북구로 이관된다. 서구 마록공원 역시 공원 내 생태학습원과 자연놀이터 등을 갖추고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내년인 2026년에는 공원 5곳이 잇따라 문을 연다. 상반기에 운암산공원(3월), 봉산공원(6월), 중앙2지구(6월)가 준공되며, 하반기에는 일곡공원(8월)과 중외공원(12월)이 공사를 마친다.

특히 운암산공원은 현재 공원 시설 공정률 93.4%를 보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곳에는 보행교와 희망숲정원 등이 들어선다. 중앙2지구 역시 92.8%의 높은 공정률을 보이며 소품마당과 시민참여정원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마지막 2027년에는 송암공원, 중앙1지구, 수랑공원이 대미를 장식한다. 송암공원은 축구장과 야영장을 갖춘 레저형 공원으로 2027년 10월 준공된다.

가장 규모가 큰 중앙1지구는 테마숲과 힐링캠핑장 등을 갖추고 2027년 6월 시민을 맞이한다. 수랑공원은 유아숲체험장과 반려견놀이터 등 특화시설을 포함해 2027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비공원 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 공원 조성비로만 2조 895억 원이 투입된다. 토지

보상비 1조 3847억 원과 공원 시설 공사비 7048억 원 전액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해 광주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덜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서구 중앙공원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광주시와 서구, 양부남 국회의원 주도로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위원장 윤풍식)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나선다.

우선 오는 30일 열리는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포럼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중앙공원 조성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대표 명품 국가도시공원! 광주에서 시작!’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퍼포먼스를 펼치며 결의를 다진다.

2부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한다.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이 ‘국가도시공원의 조성과 운영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안 부회장은 중앙공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은일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주인석 광주시 도시공원과장, 김종순 대구시 공원계획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린 논의를 벌인다.

이들은 민간 협력 방안, 타 지자체 사례 분석, 환경 보전과 이용의 조화 등을 다각도로 짚어볼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민·관·경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범시민 서명 운동 등 본격적인 여론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주인석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중앙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문가 의견과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중앙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도심 속 녹지가 민간 자본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을 돕는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공원들이 차질 없이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정과 품질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노상원 수첩’ 등 17가지 수사

수사 기간 170일·인력 251명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서 개정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전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구판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전도 의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철저히 조사하라”

이 대통령 주문, “공공기관 부적절한 태도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일부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질타하며 제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 두발언에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줘 하도록 하라”면서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에 대한 언급이다.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